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정책동향

VOL.02
2013. 03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3.2.1 ~ 2.28)

건축문화 부문

- 광주시, 2015국제디자인연맹(IDA)총회 유치
- 문화예술특구 조성으로 지역 특화 발전
- 건설폐기물로만 지었어요! '되돌림 화장실' 완공
-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경교장 64년 만에 국민 품으로
-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 변화하는 서울의 현재를 기록하다
- 대구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첫 발을 내딛다!
- '일사편리' 로 부동산 정보 이용, 전국 어디서나 빨라진다
- 미래창조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큰틀, 드디어 완성되었다
- 광주시,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 추진
- 한양도성전시관 개관 준비 특별전, '서울,도성을 품다'
- 23일 공공 데이터 활용성 높이기 위한 행사 열린다

녹색 건축 · 도시 부문

- 사회문제 고민해보는 2013년 녹색공유도시 아카데미
- 제주전기차 시범도시 추진
- 서울광장 20배 녹지(26만㎡) 시민 손으로 직접 가꾼다
- 녹색산업지원책 '그린올' 놀라운 성과 거둬
- 충남도,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만들기 시동건다
- 이제는 녹색건축 시대-에너지소비 증명제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률 본격 시행
- 사랑받는 탐방로, 이젠 생태복원도 함께 이뤄요
- 경기도, 올해 317억 원 투자해 녹색 공간 늘린다
- 우리 기술로 빚어낸 첨단 미래도시의 꿈이 펼쳐진다.
- 인천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3단계 국고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국토부,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 발전 방향 제시
- 농산어촌 개발을 이끌어갈 총괄계획가(MP) 공모선정
- 부산시, 2013년 서민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 인발연, 인천시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 연구결과
- 지역의 상생 ·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관심 폭발
- 서울시, 공공건축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 · 재건축 ·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확산보급
- 행복청, 세종시, 도시건설 위해 손잡다
- 마을공동체 사업, 설명서 따라서 쉽게 참여하세요
- 전라북도 도시경관 확 바꾼다



Contents

건축도시분야	이달의 정책 Highlights	4
정책 UPDATES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5
	건축문화 부문	7
	한양도성전시관 개관 준비 특별전, 「서울, 도성을 품다」	7
	23일 공공 데이터 활용성 높이기 위한 행사 열린다	7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민간 주도로 '제1회 International Open Data Day in Korea' 개최	7
	광주시, 2015국제디자인연맹(IDA)총회 유치	8
	문화예술특구 조성으로 지역 특화 발전	9
	건설폐기물로만 지었어요! '되돌림 화장실' 완공	9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경교장' 64년 만에 국민 품으로	10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11
	미래창조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의 큰틀, 드디어 완성되었다	11
	변화하는 서울의 현재를 기록하다	12
	대구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첫 발을 내딛다!	13
	'일사편리' 로 부동산 정보 이용, 전국 어디서나 빨라진다	13
	부동산행정정보 18종 하나로 통합 발급된다	13
	광주시,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 추진	14
	충남발전연구원, 협동조합연구포럼 운영	14
	녹색건축·도시 부문	15
	이제는 녹색건축 시대	15
	우리 기술로 빚어낸 첨단 미래도시의 꿈이 펼쳐진다.	15
	사랑받는 탐방로, 이젠 생태복원도 함께 이뤄요	16
	남원에 최대 규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들어서	16
	사회문제 고민해보는 2013년 녹색공유도시 아카데미	17
	서울광장 20배 녹지(26만㎡) 시민 손으로 직접 가꾼다	17
	서울시, 에너지 절약형 시범 아파트단지 만든다	18
	대전시, 녹색도시 조성에 507억 원 투입	18

대구시, 도심 하천 생태하천으로 조성	19
제주를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무공해의 섬으로!	20
녹색산업지원책 ‘그린울’ 놀라운 성과 거둬	20
경기도, 올해 317억 원 투자해 녹색 공간 늘린다	20
충남도,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만들기 시동건다	21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22

국토부,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 발전 방향 제시	22
지역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관심 폭발	22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공립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23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24
마을공동체 사업, 설명서 따라서 쉽게 참여 하세요	24
인발연, 인천시 특별건축구역제도 연구결과 발표	25
대구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25
대전시, 과학벨트 시행계획 수립…교과부 제출	26
대전시, 도시환경색채 특성화사업 첫 결실	26
울산산학융합지구 지정, 울산형 실리콘 밸리 조성	27
울산시, 공동주택 외벽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27
부산시, 2013년 서민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28
광주시, 도시재생형 공폐가 정비사업 추진	28
3단계 국고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9
경북도, 동해안 해양관광 개발 박차	29
KT&G 춘천 상상마당 조성 본격 추진	30
경남도, 하동항 신규건설, 조선·해양플랜트 거점항만으로 육성	31
인천시,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시행	31
대전시, 둘레산길 일제 정비…명소화 추진	31
울주군 삼남면 가천 일원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32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확산보급	32
전라북도 도시경관 확 바뀐다	33

이달의 정책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이번 달 국토부에서는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어촌 개발을 이끌어갈 총괄계획가(MP)를 공모하여 총 8개 사업지구를 주관할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8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대구시-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 사업 및 대전시-도시환경색채 특화사업, 서울시-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광주시-도시재생형 공·폐가 정비사업 추진 등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들이 다수 발표되었으며,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 지역발전 및 쾌적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통하여 품격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2월 녹색 건축·도시 부문의 추진 정책들은 계획·지원 및 조성사업 등으로 국토부에서 에너지소비증명제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첨단 미래도시 건설 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탐방로 생태복원사업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별로 대구시-생태하천 조성, 대전시-녹색도시 조성 투자 지원, 제주도-전기차 시범도시 조성, 경기도-녹색공간 투자비 확대 등 녹색건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녹색일자리 창출과 친수공간 및 녹색도시 조성 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2015국제디자인연맹(IDA)총회' 개최지로 광주시가 선정되었으며, 전남에서는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특구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2월4일부터는 '바다생태정보나라(www.ecosea.go.kr)'가 정식 서비스되고, 그간 진행해왔던 '지적재조사사업'의 큰 틀이 완성되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설폐기물로 지은 '되돌림화장실' 완공, 서울시- '서울 생활문화자료조사 보고서' 발간 및 64년만의 경교장 개방, 대구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울산·광주- '부동산행정 정보 서비스 개편', 광주시- '근대건축물 기록 보존사업' 등이 발표되었다.

이밖에 국제 디자인총회, 문화예술특구 조성사업, 근대 건축물 보존 및 기록화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근대건축물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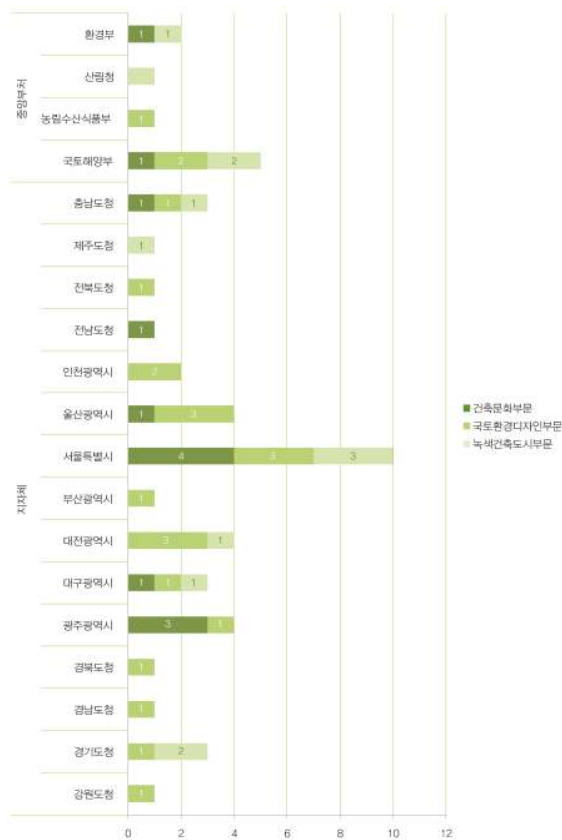
5월 한 달 동안 진행된 행사 및 전시로 2월13일~28까지 매주 수·목요일, 사회문제를 고민해보는 '2013년 녹색공유 아카데미'가 선유도 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6개의 강좌는 공동체, 에너지,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의 이슈를 공원 녹지와 결합하는 방식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도성을 품다' 한양도성전시관 개관 준비 특별전이 21일부터~5월19일까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벤트 홀에서 개최되었으며, 한양도성에 함축되어있는 다양한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23일에는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열리는 '제1회 Internal Open Data Day in Korea' 행사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2013년도 2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건축·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주체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9건 중 중앙부처는 9건(18.4%), 지방자치단체는 40건(81.6%)으로 정리된다.



중앙부처는 「녹색건축도시부문」에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사업으로 총 9건의 보도자료 중에서 4건을 발표하였으며, 「국토환경디자인부문」은 3건, 「건축문화부문」에서는 2건이 발표되었다.

가장 많은 시책 및 사업이 보도된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로 첨단 기술력 홍보 및 미래 건설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시책과 사업을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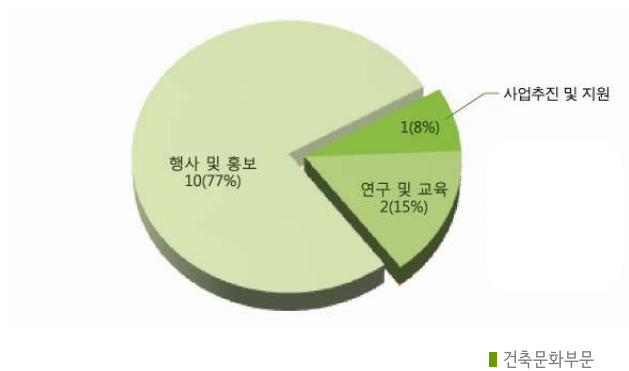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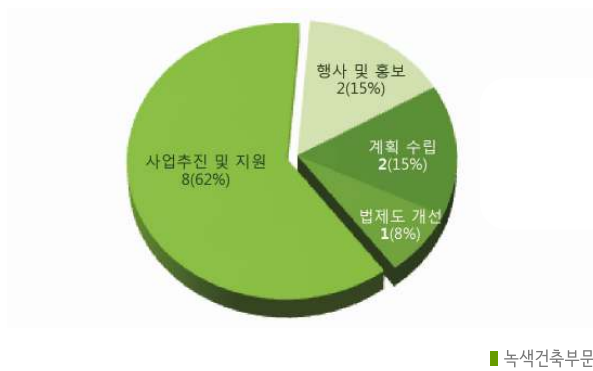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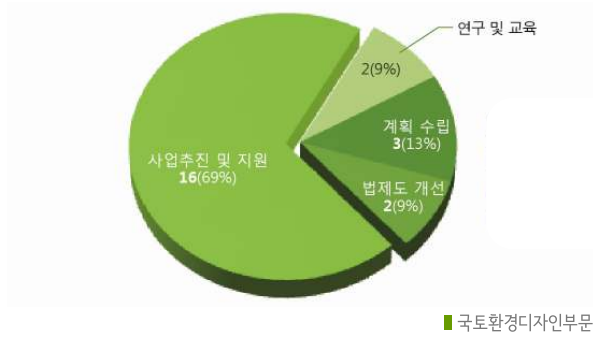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는 총 40건의 정책 보도 중 「국토환경디자인부문」에 관련한 23건을 주요하게 보도하였으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서울의 현재를 기록하기 위한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보고

서' 발간 및 '공공건축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등 총 10건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다.

주관부처		건축문화부문	국토환경디자인부문	녹색건축도시부문	부문별합계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1(2%)	2(4.1%)	2(4.1%)	5(10.2%)
	농림수산식품부	—	1(2%)	—	1(2%)
	산림청	—	—	1(2%)	1(2%)
	환경부	1(2%)	—	1(2%)	2(4.1%)
합계 (중앙부처)		2(4.1%)	3(6.1%)	4(8.2%)	9(18.4%)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청	—	1(2%)	—	1(2%)
	경기도청	—	1(2%)	2(4.1%)	3(6.1%)
	경남도청	—	1(2%)	—	1(2%)
	경북도청	—	1(2%)	—	1(2%)
	광주광역시	3(6.1%)	1(2%)	—	4(8.2%)
	대구광역시	1(2%)	1(2%)	1(2%)	3(6.1%)
	대전광역시	—	3(6.1%)	1(2%)	4(8.2%)
	부산광역시	—	1(2%)	—	1(2%)
	서울특별시	4(8.2%)	3(6.1%)	3(6.1%)	10(20.4%)
	울산광역시	1(2%)	3(6.1%)	—	4(8.2%)
	인천광역시	—	2(4.1%)	—	2(4.1%)
	전남도청	1(2%)	—	—	1(2%)
	전북도청	—	1(2%)	—	1(2%)
	제주도청	—	—	1(2%)	1(2%)
	충남도청	1(2%)	1(2%)	1(2%)	3(6.1%)
합계 (지방자치단체)		11(22.4%)	20(40.8%)	9(18.4%)	40(81.6%)
총 계		13(26.5%)	23(47%)	13(26.5%)	49(100%)

■ 각 부문별 관련기관

각 부문에 대한 세부분야별 발표 현황으로는 「국토환경디자인부문」 총 23건의 보도내용 중 '국고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도시재생형 공·폐가 정비사업 추진' 등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에서 16건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녹색건축도시부문」에서는 전체 13건 중 ‘에너지 절약형 시범 아파트단지 조성사업’, ‘제주 전기차 시범도시 추진’ 등 「국토환경디자인부문」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 및 지원분야’ 8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건축문화부문」에서는 전체 13건 중 ‘64년만의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개방’, 건설폐기물로 지은 ‘되돌림화장실 완공’ 등 ‘행사 및 홍보’와 관련하여 10(26.5%)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3(6.1%)	2(4.1%)	5(10.2%)
법·제도 개선	—	2(4.1%)	1(2%)	3(6.1%)
사업추진 및 지원	1(2%)	16(32.7%)	8(16.3%)	25(51%)
시스템 구축	—	—	—	—
연구 및 교육	2(4.1%)	2(4.1%)	—	4(8.2%)
행사 및 홍보	10(20.4%)	—	2(4.1%)	12(24.5%)
총 합계	13(26.5%)	23(47%)	13(26.5%)	49(100%)

■ 부문별 관련 세부분야

전반적으로 3월 보도자료 49건 중 총 25건(51%)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의 보도자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건축문화 부문」 ‘행사 및 홍보’ 분야의 보도자료가 12(24.5%)건 발표되었으며,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발표된 보도자료가 없었다.

건축문화 부문

한양도성전시관 개관 준비 특별전, 「서울, 도성을 품다」

2.21(목)~5.19(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벤트홀 개최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 한양도성의 탄생과 완성·수난재발견의 역사와 현재 도성 내외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한양도성전시관 개관 준비 특별전 「서울, 도성을 품다」를 2월 21일(목)부터 5월 19일(일)까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벤트홀(지하 1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 한양도성에 함축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2월 21일(목) 개최되는 제1회 한양도성 국제학술회의 “역사도시와 도시성곽”에 참가하는 국내외 도성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서울 한양도성을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도성의 탄생과 운영”, “도성의 훼손과 수난”, “훼손의 대상에서 복원의 대상으로”, “순성-도성 내외부 모습 조망”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2013.02.17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23일 공공 데이터 활용성 높이기 위한 행사 열린다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민간 주도로 '제1회 International Open Data Day in Korea' 개최

23일(토)에는 오픈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이벤트로 “International Open Data Day”가 개최된다.

International Open Data Day는 영국의 Open Knowledge Foundation 지원으로 전 세계에서 70여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행사이다. 본 행사는 Open Knowledge Foundation Korea (<http://kr.okfn.org>)가 주관하여 개최되는데, 서울시는 열린 데이터 광장과 서울시 공공 데이터 활용성 증진을 위해 본 행사를 후원한다.

이번 행사의 참여는 오픈 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40명의 참가하며,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코리아데이터허브(<http://thedatahub.kr>) 등 국내에 공개된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분야의 데이터를 직접 만들고 정제하는 과정을 튜토리얼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캠프가 진행되고 있으나,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활용적 측면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오픈 데이터의 활용보다는 구축에 초점을 두고 오픈된 데이터를 수집, 정제, 연계를 통해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개선하여 활용성 높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은 “데이터의 공개도 중요하지만 오픈 데이터가 일상생활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공개된 데이터의 정확성, 유용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가 고품질의 활용성 있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2.21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민간 주도로
'제1회 International Open Data Day in Korea' 개최

Open Knowledge Foundation Korea (<http://kr.okfn.org>)가 주관 23일(토)에는 오픈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이벤트로 “International Open Data Day”가 개최된다. International Open Data Day는 영국의 Open Knowledge Foundation 지원으로 전 세계에서 70여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행사이다. 본 행사는 Open Knowledge Foundation Korea (<http://kr.okfn.org>)가 주관하여 개최되는데, 서울시는 열린 데이터 광장과 서울시 공공 데이터 활용성 증진을 위해 본 행사를 후원한다.

이번 행사의 참여는 오픈 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40명의 참가하며,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코리아데이터허브(<http://thedatahub.kr>)등 국내에 공개된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분야의 데이터를 직접 만들고 정제하는 과정을 튜토리얼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캠프가 진행되고 있으나,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활용적 측면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오픈 데이터의 활용보다는 구축에 초점을 두고 오픈된 데이터를 수집, 정제, 연계를 통해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개선하여 활용성 높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은 “데이터의 공개도 중요하지만 오픈 데이터가 일상생활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공개된 데이터의 정확성, 유용성도 매우 중요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가 고품질의 활용성 있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013.02.21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광주시, 2015국제디자인연맹(IDA)총회 유치

2015년 10월, 70여개 국가 세계디자이너·디자인 관련단체 회원 등 4,000여명 참여

광주광역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축제인 ‘2015국제디자인연맹(ida) 총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1월31일(현지 시각) 캐나다 몬트리올 ida사무국에서 2015국제디자인연맹(ida) 총회 개최도시로 광주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총회 유치를 위해 그동안 ida사무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회 유치 필요성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왔다. 이와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성공개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교통, 숙박, 음식, 안내, 관광 등 분야를 정비하는데도 힘써왔다.

국제디자인연맹 총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디자인 축제로서, ida는 2003년 9월 icsid(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와 icograda(국제그래픽디자인협의회)가 공동 주관으로 설립, 2008년 9월 ifi(국제실내건축가협의회)가 합류한 세계디자인을 대표하는 국제 디자인 연합단체다.

2015 국제디자인연맹총회는 2015년 10월 중 70여개 국가에서 세계디자이너, 디자인 관련 단체 회원 등 4,000여명이 참여할 가운데 김대중 컨벤션 등에서 10일간 열린다. 시는 총회기간에 ida총회, 소속 단체별 총회, 문화, 과학기술, 산업, 교육 등 다학제적 교류, 35세 이하 영 디자이너 국제워크숍, 문화행사, 학생워크숍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ida 전시회 디자인비엔날레 전시회와 동시에 열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 중에는 2013년 ida총회 운영위원회를 광주에서 열어 ‘글로벌디자인도시 광주’ 선포식을 함께 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에는 총회 지원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11월 중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2회 ida총회에 차기 개최국 자격으로 참석해 광주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유치 성공으로 시가 2013년을 디자인 산업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21세기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아시아 디자인중심도시 광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할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5년에는 광주비엔날레 개최 20주년으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전도 열릴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한국 디자인의 성과를 함께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주하계유니버시

아드대회 개최와 새로 문을 여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3.02.01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

문화예술특구 조성으로 지역 특화 발전

전남도, 진도 민속·화순 실학·강진 다산·고흥 분청 등 추진

전라남도는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자원을 문화예술특구로 조성,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예향으로서의 브랜드를 극대화하고 토지이용규제도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남도 내에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장흥문학관광기행특구’와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가 문화예술분야 특구로 지정됐다. 현재 특구조성을 추진 중인 곳은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와 화순 호남실학특구, 강진 다산 및 영랑생가 문화특구, 고흥 분청문화특구 등 4곳이다.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는 지난 1월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지식경제부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특구 내에 한국남종화역사관 건립 등 민속문화클러스터 거점화사업, 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린터사업, 진도민속문화공간 프로젝트사업, 진도민속문화산업화사업 등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은 호남을 대표하는 실학자 하백원과 나경적이 태어난 이서야사마을을 중심으로 실학특구를 조성키로 했다. 호남실학본거지 거점화사업과 관련 유적지 정비 및 복원사업, 콘텐츠활용사업, 실학마을 상품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강진은 다산과 영랑을 기반으로 한 문학관련 문화관광단지를 조성, 역사문화자원의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산기념관 및 청림교육관 건립, 모란공원 조성과 함께 다산학당 체협 등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5월까지 학술조사 용역을 완료키로 했다.

고흥은 두원 윤대리 분청사기요지(사적519호)와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분청문화특구를 조성키로 했다. 유무형의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고흥 덩벙분청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덩벙분청체험·교육 및 관광홍보사업을 추진하며 설화문학관 및 동초 판소리전수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지정된다. 세제감면 혜택은 없으나 토지이용규제특례에 따라 국토이용, 산림농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행 규정의 적용이 완화된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시군별 문화예술특구가 조성되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특화 브랜드 가치가 향상돼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라남도는 특구 내 문화시설 건립 시 광특예산을 우선 지원해 조기에 활성화 할 계획이다.

2013.02.23
전남도청 문화예술과

건설폐기물로만 지었어요! ‘되돌림 화장실’ 완공

세계 최초 순환골재 100% 사용 건축물 ‘되돌림 화장실’ 완공

세계 최초로 100%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지은 건축물인 ‘되돌림 화장실’이 완공된다. 환경부는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에 순환골재로 지은 ‘되돌림 화장실’을 완공하고, 설 연휴 기간에 맞춰 6일 개장한다.

‘되돌림 화장실’은 건축물을 허물고 남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로 지은 건물로, ‘건설폐기물을 다시 건축물로 되돌렸다’는 뜻과 ‘자연에서 만들어진 음식물이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순환골재를 활용하면 국가 총 폐기물 발생량의 절반(49.9%, 2011년 기준)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소각·매립량 감축은 물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바다모래 등 천연골재 부족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환경부는 유동인구가 많고 화장실이 부족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남녀화장실(105㎡)과 함께 홍보관(67㎡)을 설치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친환경 건설자재인 순환골재를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관에는 순환골재 생산기술·활용사례 등이 전시·홍보된다. 또한, 순환골재 사용 건축물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되돌림 화장실’을 향후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순환골재 사용 건축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 활용용도(현재는 주로 흙을 쌓거나 덮는데 사용되며, 콘크리트용 등 구조물 용도로는 제한적 사용)확대 및 관련 기술기준의 개정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되돌림 화장실 조감도

‘되돌림 화장실’은 환경부·국토해양부 융합행정의 결과로 미래에 그 수명이 다하면 다시 순환골재로 재활용돼 진정한 의미의 자원순환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번 준공이 순환골재가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3.02.05
환경부 자연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경교장' 64년 만에 국민 품으로

서울시, 3년여 걸친 원형 복원 마치고 내달 2일(토)부터 전면 무료 개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백범 김구가 약 4년여 간(1945.11.23~1949.6.23) 거주하며 통일운동을 하다 서거한 역사적 현장인 경교장(京橋莊)이 6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사적 465호인 경교장을 3년여 간에 걸쳐 원형 복원해 내달 2일(토)부터 국민들에게 무료 개방한다고 밝히고,

개방을 앞둔 28일(목) 사전 공개했다.

경교장은 1945년 11월 중국에서 한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청사로 사용하던 곳으로, 김구 서거이후 미군주둔지, 주한 대만대사관저 등으로 사용되다 1967년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이 매입해 병원 건물로 사용해왔다.

이후 역사적인 유적인 경교장을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과 시민 사회의 문화재 지정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서울시와 삼성병원이 오랜 협의를 거쳐 소유는 그대로 두고 전체 공간만 복원하는데 합의, 경교장 내 모든 병원시설을 이전 완료('10. 6. 30)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복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복원 설계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10. 10. 13)를 완료했다.

시는 복원된 경교장의 공간 복원을 통해 당시의 생활 모습은 물론 김구 서거 당시의 총탄자국까지 생생히 재현했을 뿐 아니라, 속옷에 땀에 젖은 밀서나 암살 당시 입었던 혈의(血衣)까지 전시해 뼈아픈 역사까지 후대에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 기간 대사관 및 병원시설로 사용되면

서 변형된 내부 평면을 철거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사료 및 지적도, 사진은 물론 증언, 전문가 등의 자문과 고증 등을 꼼꼼히 거쳤다. 이렇게 복원된 경교장은 총면적 945㎡로 건물 1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경교장은 건물 자체가 문화재인 관계로 유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 건물의 원형훼손 정도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훼손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전단지 등을 중심으로 유물 원본을 전시하고, 나머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백범김구기념관 등 소장기관의 협조를 받아 복제 유물을 전시하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경교장 시민 개방을 시작으로, 문화재청, 종로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복원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명륜동 장면 총리 가옥, 신당동 박정희 대통령 가옥, 서교동 최규하 대통령 가옥을 금년 중 개방하고, 이화장, 안국동 윤보선 대통령가옥도 복원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 유족과 협의해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 복원된 홀



■ 복원된 응접실



■ 김구 혈의(등록문화재 제439호) - 복제



■ 데드마스크 - 복제



■ 백범일지 초간본과 서명본(1947) - 원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당시 모습을 진정성 있게 재현하고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 경교장에서의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의 활동상 등 경교장의 역사를 후대에 고스란히 전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경교장 서측과 북측은 강북삼성병원과 직접 연결되어있고, 정원 등은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복원에서는 제외돼, 이 부분에 대한 복원 검토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2013.02.28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국가 「바다생태정보나라」 포털서비스 개시

국토해양부는 우리 바다와 갯벌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 웹사이트인 '바다생태정보나라' (www.ecosea.go.kr)가 2월 4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갯벌정보시스템에 해양생태정보시스템 및 해양보호구역 센터 자료를 통합한 '바다생태정보나라'는 우리 바다 생태의 모든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다생태정보나라'는 갯벌, 해양생태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자료 DB를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는 지리정보시스템(Web-GIS)을 통해 제공되며 해역에 따른 해양생태 정보를 지도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바다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과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생태사진·동영상, 갯벌체험 및 해양보호구역 생태여행 등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e-book 도서관, 알기 쉬운 갯벌퀴즈, 교과서에 나오는 갯벌이야기 등 어린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메뉴도 운영하고 있다.

향후 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 구축 및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유익한 웹사이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인식 증진 및 해양생태관리정책 결정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계획이다.

2013.02.01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미래창조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큰틀, 드디어 완성되었다

국민행복지수 ↑, 2030까지 1조3,000억원 투입 기본계획 확정

국토해양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地籍)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하여 새롭게 조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정부(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12.9.13)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지 1조 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격을 높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12~’ 30)은 국민복지 향상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2030년까지 사업기간(19년)을 4단계로 구분하여 5년마다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하여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확정으로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네이밍)사업의 힘찬 비상을 위한 추진동력이 장착된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2.26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과 사업지원팀

변화하는 서울의 현재를 기록하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보고서’ 전3권 발간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강홍빈)은 104마을, 청량리, 광장·중부·방산시장의 공간과 서민들의 삶을 담은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보고서’ 3권과 기록영상 3편을 제작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이 20세기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거쳐 온 수많은 변화 과정들을 상세하게 담아냈다. 도시공간의 형성 과정과 2012년 현재 서울의 모습, 서울에서 살아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인류학, 사회학, 경제지리학, 건축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각 지역의 변

화양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했다.

보고서에 담긴 지역은 철거민의 이주정착지 중계동 104마을, 서울 동부권 핵심 부도심 청량리, 시장 위의 시장 광장·중부·방산시장이다. 104마을은 서울 지역의 확장 과정에서 노원구 중계본동 산 104번지에 정책적으로 조성된 철거민의 이주정착지로서 통별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구역화된 생활과 골목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다. 청량리는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할 만큼 서울을 대표하는 동부권 대표 도심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최초 근대전차의 종착점이자 경원선·경춘선·중앙선이 하나로 모이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시장·주거단지·교육·위생시설 등이 모여 대규모 복합생활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광장·중부·방산시장은 서울 도심부 전통시장이자 특화된 전문시장으로서 의류원단·도매 중심의 광장시장, 특수인쇄 및 포장자재 주문생산의 방산시장, 국내 최대 건물물 도매시장인 중부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104마을 이주 당시 주민들이 직접 지은 가옥과 오래된 골목 청량리 일대 부흥주택 및 도시한옥을 실측 조사하여 건조 환경의 변화를 그렸다. 또한 광장·중부·방산시장의 입주 점포(광장 3,268개, 중부 1,422개, 방산 2,513개) 전수조사를 통한 최초의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통망 속에서 도심부 시장의 공간적 성격을 해석한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보고서에는 조사대상 지역의 역사와 공간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서울의 도시발달과 함께 삶을 꾸려온 서울 사람들의 이야기도 생생히 담겨있다.



■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보고서’ 3권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보고서는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정보센터, 국공립 도서관, 서울 지역 작은 도서관 등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별도 판매는 하지 않는다. 해당 보고서는 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seoul.kr>)에서 원문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2013.02.15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대구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첫 발을 내딛다!

대구 경관자원 52선 자료집 발간

대구시는 지역의 숨은 경관자원을 발굴 및 재조명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를 소중한 기록물로도 남기기 위해 대구 경관자원 52선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지난 2011년 선정된 경관자원 52선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위치와 역사, 경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자료집에 수록된 시각 이미지는 컴퓨터그래픽(CG)이미지 그림, 근대사진, 현대사진 등으로 사계절과 시차가 반영된 사진을 최대한 수록했으며, 내용적으로는 대상지의 위치, 역사적 스토리, 주변 경관 등을 풀어 놓았다. 대구 경관자원 52선 자료집은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됐으며, 자료집(pdf 파일)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우리 지역의 장소적 가치를 발굴·기록해 시민들의 공동 유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착수했다.

대구시는 올해 '시민공모전'을 통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시경관 사진을 모아 팸플릿으로 발간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시경관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대구의 경관과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도시경관 화보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2013.02.15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일사편리'로 부동산 정보 이용, 전국 어디서나 빨라진다

울산시, 지난해 12월 구·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부터 지적, 토지, 건축, 등기 등 18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공부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시민들께 부동산 정보 이용을 훨씬 편리하게 하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오는 2014년까지 지적, 건물, 토지, 가격, 등기관연 공부를 통합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지적, 건물 11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한 장으로 통합 발급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를 구·군에 설치하고 올 1월부터는 규격화된 개별 증명서 서식으로만 발급하던 기존의 공부 발급 시스템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처리결과 정확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오는 8월부터 11종의 공부 발급에서 1종으로 간편하게 제공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를 통해 부동산 정보 이용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일사편리' 서비스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이용하면 은행, 행정관서 등에 제출하는 다수의 부동산 공부가 줄어 그동안 사용되던 종이량이 최소 30%로 감축되고 또한 측량과 토지 이동,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방문이 최소화 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 건축, 가격 등 다양한 정책정보 분석이 가능해져 의사결정시 정확성과 예측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2.12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행정정보 18종 하나로 통합 발급된다

광주시, 국토부와 내년까지 1장에 모든 정보 담은 '일사편리'사업 추진

광주광역시시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18종을 2014년까지 한 장으로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일사편리) 사업을 국토부와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돼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청

을 하거나 관련 증명을 개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부동산 정보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토지 지목변경 등 일괄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중복업무가 해소되며 18종의 개별서류의 일괄발급, 대기절차 축소 등에 따라 시간,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민원처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발급과 관련된 장비 등을 올해 안으로 구입토록 자치구에 통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합발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이다

그동안 민원인이 부동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이 곳 저 곳을 오가며 필요한 서류를 떼야 했지만 본 시스템이 완료되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일사편리'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02.20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광주시,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 추진

27일 시청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광주광역시는 27일 오후5시 시청 10층 도시디자인국 회의실에서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 4곳에 대해 기록 보존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기록 보존사업 용역대상(4개소) : 광주기계(북동), 구. 임씨가구(제림동), 지성고시원(백운동), 한금석 가옥(북동))

이 사업은 근대건축물의 연대가 짧아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각종 개발과 신개축 등으로 근대건축물이 파괴되고 있어 사전에 실측 설계자료 등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행중이며, 이번 용역에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실측도면 작성, 기록보존용 사진 등을 촬영해 멸실 및 훼손에 수리 복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향후 활용방안도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근대건축물은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1960년대까지 지어진 건축물도 사업에 포함되며, 장단점을 분석한 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이번 용역을 단순한 건축물의 기록화 사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향후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3.02.26<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충남발전연구원, 협동조합연구포럼 운영

13일부터 '충남협동조합연구포럼'을 운영

충청남도과 지역재단 등이 함께하는 '충남협동조합연구포럼'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기존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은 13일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총 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대표 및 종사자, 연구자, 활동가, 공무원,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다. 이에 따라 13일 충발연에서 열린 제1차 포럼에서는 사회투자지원재단 장원봉 상임이사의 "자본주의와 협동조합: 왜 협동조합인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우 운영위원의 "역사와 사상으로 본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등의 주제 발표와 포럼 참석자 간 자유토론을 갖고 협동조합의 이해를 넓혀갔다. 이번 포럼은 '협동조합 발전 방안 전략연구과제'와 연계된 것으로서 우선 올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3.02.13 <보도자료>
충남도청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정책지원센터

녹색건축·도시 부문

이제는 녹색건축 시대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률 본격 시행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26.9%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12년 2월 제정되었으며, 새로 도입된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이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을 요약하면, (1)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을 수립하며, (2)에너지소비증명제 등과 연계하여 녹색건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3)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4)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가이드를 마련하여 민간 건축물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5)그 외에도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 등을 위한 R&D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녹색건축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건축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녹색건축 자재 및 설비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3.02.20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우리 기술로 빚어낸 첨단 미래도시의 꿈이 펼쳐진다

U- City 연구단 R&D성과 발표 및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국토해양부는 도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래 U-City 핵심 첨단 기술의 국산화 및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U- City 연구단 R&D 성과 발표 및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2013년 2월 26일(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교통·방범·방재 등 도시 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통합제어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U- City 통합플랫폼 기술 및 서비스의 국산화·표준화체계가 마련되어 운영비 및 구축비 절감, 지자체 통합운영센터 간 시스템 호환으로 정보공유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아울러 U-City 관련 기술실시계약 17건, 특허 105건, 실용시안 및 디자인·상표 14건, S/W 79건 등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행사는 연구성과 보고, 기술이전 조인식, 전시관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U- City 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개발된 성과물을 학계, 산업계, 지자체 등

과 공유하고 시범사업과 신도시 U-City 구축사업에 적용하여 U-City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한국의 U-City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등 해외첨단도시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3.02.25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사랑받는 탐방로, 이젠 생태복원도 함께 이뤄요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2017년까지 2,500km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목표로 2012년까지 1,084km를 조성하여, 탐방로 연계성 확보로 탐방객 활용성은 물론 생태축 건강성까지 제고하고, 훼손·단절된 지역의 생태복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생태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지역별로 조성된 국가생태탐방로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탐방객의 폭넓은 활용과 생태복원의 가능성을 높여나가게 됐다.

환경부는 2017년 2,500km 조성을 목표로 시행중인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을 앞으로는 탐방로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토 생태축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남녀노소 누구나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중심의 길로서 ‘국가급으로 인증’을 받은 탐방로를 말한다.

2013년에는 약 336km의 구간에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약 400km, 55억원 규모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생태탐방로가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생태적 가치 증진과 더불어 지역 문화와 접목한 자연친화형·테마 중심의 탐방노선을 발굴하고, 이용·관리실태 평가 및 보고체계를 마련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탐방자원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탐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계가 훼손·단절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태탐방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도 병행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탐방로를 조성하되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계 보전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2013.02.21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남원에 최대 규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들어서

2014년까지 400억 들어 백두대간 마루금에 문화·역사·생태 체험공간 조성

산림청은 전라북도, 남원시와 함께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는 남원시 운봉읍 일원에 2014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백두대간 생태체험 교육장을 만들기로 했다. 3만3000여㎡의 면적에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백두대간 산림생태교육장은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을 홍보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지리산 둘레길과 백두대간 마루금에 연접해 한반도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남원 백두대간 산림생태교육장에는 백두대간 테마로드, 산악 모험원, 숲속 휴양원 등 체험휴양시설이 들어서고 야생 동·식물전시관을 포함하는 국내 최초의 4계절 테마파크형 생태문화전시관도 만들어진다. 생태문화전시관 예정지인 운봉 노치마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가는 마을로 영호남의 주요 분수령(分水嶺)이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흐른 물은 진주 남강을 지나 낙동강에 닿고, 서쪽으로 흐른 물은 남원 요천을 지나 섬진강에 합류한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완공되면 지리산 둘레길과 바래봉 철쭉

군락지와 연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충북 괴산, 경북 상주, 강원 양양 등 3곳에서 백두대간 산림생태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남원을 비롯해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경남 거창과 전남 구례에도 생태교육장을 만들 계획이다.

2013.02.15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사회문제 고민해보는 2013년 녹색공유도시 아카데미

공동체, 에너지,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이슈를 공원녹지와 결합하는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

서울시는 (재)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영등포구 양화동에 위치한 선유도공원에서 2월13일(수)부터 28일(목)까지 3주간 매주 수목요일 총 6회에 걸쳐 ‘푸른도시 서울’의 비전을 함께 그려보는 ‘녹색공유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총 6강으로 구성된 ‘녹색공유도시 아카데미’는 공원녹지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서울의 공원녹지와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이 목표다. 강좌는 ‘녹색의 전환도시 운동’, ‘후쿠시마에서 마르쉐까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살아 숨쉬는 도시공명의 도시’, ‘청년과 일자리’, ‘oo은 대학’ 등 6번에 걸쳐 이뤄지는데 강연 후 강사와 수강생이 ‘녹색공유도시, 서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녹색과 마을을 꿈꾸는 청년과 학생, 도시공동체 운동을 실천하는 풀뿌리 활동가, 녹색과 참여를 통한 도시혁신을 꿈꾸는 시민운동가, 이 시대의 새로운 전망을 찾는 모든 시민이다.

2013.02.08
서울특별시 서부녹지공원사업소

서울광장 20배 녹지(26만㎡) 시민 손으로 직접 가꾼다

서울시「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프로젝트」로 26만㎡ 녹지 관리

올해 서울시내에 서울광장 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26만㎡ 규모의 녹지가 시민들의 손으로 조성된다. 대규모 공원 조성 방식이 아닌, 시민이 서울의 주인이 되어 녹색도시를 직접 일구는 방식에 의해서다. 26만㎡는 나무 돌보미 사업(Adopt Greens) 246,000㎡, 동네 골목길 조성 13,000㎡, 민관 파트너십 사업 1,000㎡이다.

지하철역, 공원, 가로변 등엔 언제나 머물고, 즐기고, 사색할 수 있는 의자 1,110조가 ‘의자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설치된다. 이 중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되는 메모리얼 벤치 30조는 오는 3월부터 시민스토리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4월중 시청 앞 광장 내 위치 선정부터 시민들의 스토리를 남기는 작업까지, 시민이 주인이 되어 추진한다.

서울의 대표적 치유사색의 공간이 될 서울 둘레길도 내년 완전한 연결을 목표로 올해 전체 178km의 약 78%까지 연결을 완료하며, 가로수 사이, 교통삼벽만고가로도 밑까지 녹지로 채워질 전망이다.

서울광장 8배 규모의 서울시 최초 수목원인 ‘푸른수목원’이 5월에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태원 부근당의 이야기를 담은 동네 마을 숲 등 이야기가 있는 테마 공원과 24개소가 새롭게 마련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원 및 녹지 확충, 도심 쉼터 보강, 공원 안전 계획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은 시민이 서울의 주인이 되어 녹색도시를 직접 일구는 것으로서 시민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녹색공간, 서울시 Green으로 치유에 나서다,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원, 안심하고 즐거움이 있는 공원 4개 방향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된다.

서울시는 우선 관 주도의 일방적인 녹지 조성에서 벗어나 녹지의 조성부터 관리까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해 그 동안의 ‘형식적인 주민 참여’ 사업구상단계부

터 설계, 시공, 관리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3.02.14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공원조성과·조경과·자연생태과

서울시, 에너지 절약형 시범 아파트단지 만든다

시, 대림 I&S(주)와 공동주택 분야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형 시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에너지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는 공동주택 분야의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림I&S(주)와 민간 분야의 기술력과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높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림 I&S(주)는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공급 기술력과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시범단지 전반에 대한 에너지 진단 실시, 고효율 에너지시설로 교체, 입주민 만족도 조사하여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제공하게 된다. 시는 시범단지의 에너지 절감효과와 주민만족도를 종합하여 실용 모델을 제시하여 공동주택 분야의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활성화를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열창호, 단열재, 고효율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세대(주택소유주)에게 교체 비용의 80%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최저 2백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다.(융자이율은 연 2.0%이며 8년간 분할상환 가능(무담보이며 보증보험 가입))특히, 올해 2월부터 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매시 에너지평가서 첨부이 의무화되므로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물 에너지효율화가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너지소비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전가·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후아파트의 경우에는 에너지 손실이 많은 부분에 대한 공동 시설개선으로 교체비용 인하, 일괄처리에 따른 편리성, 아파트 외관 개선으로 가치상승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시범 참여를 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1개 이상의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에너지절약형 시범 아파트 단지 조성을 통해 새는 에너지를 막고, 쓰는 에너지의 효율은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서울시 건물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3.02.19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대전시, 녹색도시 조성에 507억 원 투입

원도심 등 소외지역 녹지 공간 확대 등 7개 사업 분야 추진

대전시가 올해 생활공간 녹화 및 공원조성 등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507억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원도심 등 소외지역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분야별로는 생활공간 녹화(56억 원), 녹지벨트 구축(15억 원), 계절별 꽃도시 조성(5억 원), 도시숲 질적 고도화(38억 원), 대단위 공원조성(220억 원), 공원이용 활성화(54억 원),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119억 원) 등 7개 사업 분야다.

세부 사업계획으로 생활공간 녹화를 위해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4개교, 건축물 옥상녹화 2곳, 쌈지공원(시민휴식공간) 조성 5곳, 학교 숲 조성 7개교, 사회복지시설 녹색 복지 숲 조성 4곳 등을 추진한다.

또 녹지벨트 구축은 견고 싶은 가로수길 2곳, 도로변 경관개선 6곳, 횡단보도 그늘 목 식재 25곳, 도시구조물입면녹화 1곳, 가로수 보식 및 생육환경개선 19곳 등이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 보문산 생태숲길(임도) 조성, 등산서비스 기능 확대, 자연휴양림 서비스 제고, 2013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등 산림자원의 녹색관광 자원화로 기후변화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앞으로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내실있게 추진해 도심 녹지 비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앞으로 대전을 하나의 큰 숲(공원화)으로 재창출하고, 원도심 등 소외지역 녹지공간을 확대해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3.02.21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대구시, 도심 하천 생태하천으로 조성

도심하천 정비사업으로 친수공간 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

대구시는 기후변화와 홍수 피해에 대비하고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13년 지방하천 정비에 국비 149억 원을 포함한 총 24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수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들이 친근하게 하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깨끗하고 풍성한 강을 조성하고,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고 도심 재정비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98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어 3년 후에는 크게 달라진 도시의 하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비대상 하천으로는 불로천, 팔거천, 옥수천 동화천, 울하천, 하빈천, 진천천, 달서천, 대명천 등 15개 하천이며, 주요 정비 내용은 생태하천 복원과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춰 제방 축조 및 보강, 호안 정비, 산책로 및 자전거 길 설치, 조경 식재 등이다.

동구 도동에서 금호강으로 흘러드는 불로천(L=3.5km)은 하천권역 내 천연기념물 제1호인 도동 측백수림대가 입지해 관광객을 위한 탐방로 및 자전거 길 등으로 관광과 레저 등이 어우러진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한다. 지난해까지 하천 내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관로 부설, 징검다리 및 체육시설 설치, 저수·고수호안 돌쌓기 등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자전거 길과 탐방 산책로 설치로 불로천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돼 시민들이 보다 쉽게 금호강에 접근해 다양한 하천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동천동에서 금호강까지 구간인 팔거천(L=1.13km)은 휴식공간 확보와 청정한 하천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저수 호안 공사 등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편의시설인 산책로와 생활 체육시설, 조경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성구 옥수천(L=4.3km)은 도심하천의 특성을 감안해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기능과 친수기능을 갖춘 하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PT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에는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하천 저수로에 자연석 돌쌓기 등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친수공간 조성 및 산책로, 자전거 길 등을 설치하고 2014년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심하천은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기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전거 길, 탐방로, 생활체육시설 등 하천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3.02.05
대구광역시 건설방재국 하천과

제주를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무공해의 섬으로!

전기차 보급대상 일반도민까지 확대 추진 : 상반기 보급실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 및 충전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1년 4월 환경부지정 전기차 선도도시로 제주도가 선정된 이후 전기자동차 239대 및 충전기 386기 등을 보급, 전국 최고수준의 전기차 상용화 인프라를 구축한데 이어 2013년부터는 보급대상을 종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기업체, 일반 도민에게까지 보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이 민간에게까지 확대되면, 45백만원의 높은 가격(전기차 Ray 기준)에 대한 국비보조금외 도비보조금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좀 더 많은 도민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조기상용화의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는 전기충전기 이용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구축된 전기충전기 중 실증사업용 전기차 충전기에 호환문제를 상반기 중 해소하여 도민은 물론,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전인프라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및 충전인프라 통합 시스템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을 1/4분기 중 확정하고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의 전기차상용화 인프라를 제주에 구현함으로써 관련기업의 제주유치 등 민간투자시장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3.02.05

제주도청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녹색산업지원책 '그린올' 놀라운 성과 거둬

2012년 111개 기업, 115개 기술 지원

경기도 녹색산업지원책인 그린올(Green-All)사업이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올 사업으로 총 111개 기업, 115개 기술이 녹색인증 및 컨설팅, 마케팅, 해외인증취득지원, 시제품제작, 국내특허출원 비용, 시험분석비용, 전시회참가 비용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2012년 녹색인증을 취득한 87개 기업 중 37개 기업 성장성을 조사한 결과, 녹색 인증 취득 후 공공기관 등 거래처 64곳이 증가했으며, 내수 300억 원 및 수출 230만 달러의 계약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1년 녹색인증을 취득한 74개 기업 중 52개 기업이 총 143억원의 매출 증대 및 8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2010년 녹색인증을 취득한 25개 기업이 녹색인증 취득 전에 비해 332억원 매출증대, 134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올렸다.

한편, 그린올 사업은 정부의 녹색인증 제도 시행(2010. 4월)에 발맞추어 도내 녹색인증(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컨설팅에서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 자금 및 투자지원까지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린올 사업 내에 있던 세부사업인 시제품제작, 해외인증취득, 전시회참가지원, 국내외특허출원 비용지원 등을 단위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홍보동영상을 제작 지원한다. 또한, 올 2월 중 '경기도녹색기업 지원시스템(green-All.gg.go.kr)'을 구축하여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시장 동향 및 전문가정보를 제공해 녹색기업의 정보력 및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13.02.13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 녹색산업육성팀

경기도, 올해 317억 원 투자해 녹색 공간 늘린다

도립공원 정비, 도시공원 조성, 녹색일자리 창출 등에 317억 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도내 도립공원 조성과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총 19개 사업에 3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먼저 명품 도립공원 조성을 목표로 남한산성, 연인산, 수리산 등 3개 도립공원에 85억 6천 3백만 원을 투입, 생태복원 위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간 320만 명이 찾는 명소인 남한산성도립공원은 2014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자연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우량소나무(60~80년생 12,300그루)를 잘 가꾸고 훼손된 탐방로 5개 코스 72킬로미터를 정비한다.

연인산도립공원은 경관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 용추계곡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수리산도립공원은 공원 조성에 앞서 매봉이골을 중심으로 토지매입에 들어간다. 도심 내 녹색공간 확충에는 225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도는 부천 송내 근린공원, 안산 반달 근린공원, 군포 초막골 근린공원, 하남 덕풍 근린공원 등 도심 속 도시공원 4개소 71만 3천㎡를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투리땅에 62개소의 썸지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녹색공간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7개소에 숲 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도내 13개 시·군에 총 36km에 이르는 가로수 길을 조성,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등을 심을 예정이다.

친환경적 가로수 병해충방제를 위해 천적을 이용한 시범사업도 4개소에서 진행된다. 또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녹지관리원 35명과 학교 숲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해 도시녹지관리원은 도시녹지 자원조사와 체계적 유지관리 업무를 맡게 되며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학교 내 수목 식재·관리계획 수립, 수목관리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는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도시녹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2013.02.20

경기도청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

충남도,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만들기 시동건다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자문단 구성 설계심의 등 지원

충청남도는 조경녹지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녹지조경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도내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녹지조경사업의 사전설계심의, 기술지도 및 현장토론 등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함은 물론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문, 지원하게 되는데, 오늘 2월말부터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숲 조성 10개소와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내 녹색복지공간 조성 9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설계서를 시군에서 제출받아 심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자문단은 도내 대학교의 조경학과 교수 2명과 시민단체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 관계자, 산림기술사 등 5명으로 구성하였다.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행복충남 건설을 위하여 올해에 학교숲, 녹색복지공간, 담장허물기, 도시숲, 행복한 삶의 공원, 명품가로숲 조성 등 7개 사업에 147억여원을 투입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며, 시범적으로 녹지조경분야 2개 사업에 대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점차 조경사업 전문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13.02.13

충남도청 산림녹지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부,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 발전 방향 제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 발표

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과 국내 건설시장이 단순 시공위주의 양적 성장을 지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과거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과도하여 수급불균형 상태가 유발되었으나, 시공능력이 갖춰진 우량업체를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건설기술의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며, 기능인력 고령화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건설 분야의 고질적 병폐로 인식되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수직적 문화 역시 건설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5년이 건설 산업 지속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건실화’를 통한 내실화다.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외연확대다. 줄어

들고 있는 국내 시장을 보완하고 미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셋째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의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5년간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천을 통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3.02.14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지역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관심 폭발

2013년도 지자체간 연계협력 신규사업 공모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수산물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공동으로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모한 결과 많은 지자체가 폭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였다. 이번 공모 결과를 보면 122개 지자체가(사업주관 지자체 53개소)참여, 57개 사업에 총 2,158억원(2013년 국비 소요 631억원)을 신청하였다.

지역별로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부산·인천·대전이 각 1건, 대구·광주가 각 3건이며,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경기 4건, 강원 8건, 충북 2건, 충남 3건, 전북 9건,

전남 7건, 경북 6건, 경남 3건, 제주 2건을 신청(총 53건 지자체)하였다. 신청된 사업 중 가장 많이 차지한 분야는 문화관광 분야로 26건, 농식품 분야는 21건, 기타 기피시설 광역화장장, 보육시설,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2013년 연계협력사업의 조기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매칭비율, 보조금 중복성 등을 검토(2.20~2.21까지)하고, 3월 중 지역발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까지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속적인 지역 간 협력증진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규모를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3.02.20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서울시, 공공건축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신·증축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각종 복지관 등 공공건축물 대상
현재 보육서비스는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무상보육 시대에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대 시급하며, 과거 정부도 의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 했으나, 과도한 설치비용(신축기준 25억~40억원/개소)의 재정적 부담으로 무산되었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신·증축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각종 복지관 등 공공건축물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되면 서울시는 친환경 리모델링비로 1,718천원/㎡과 학습 기자재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드는 몇 십억 비용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넘어, 기존 건물을 활용해 저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의무화했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 서울시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 108

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했으며, 이때 1개소 당 신축(평균 25억)대비 평균 17억 원을 절약해 ‘1/3 비용절약형 국공립어린이집 서울모델’을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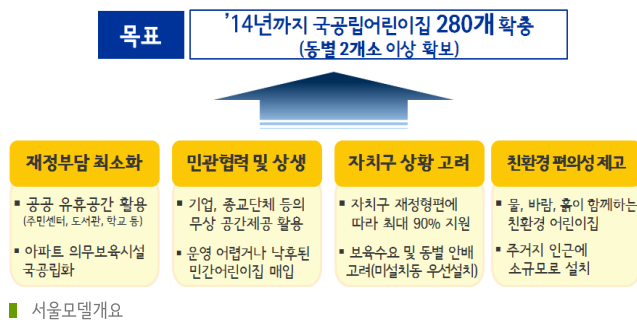
유형	방법
①비용절감 모델	기존 공공건물·신축 SH임대주택 등 활용해 비용 1/3로 줄여
②민관상생모델	기업, 단체, 개인이 설치장소 제공+시가 리모델링비 지원
③지역균형 모델	국공립어린이집 아예 없거나 한 곳 밖에 없는 등 우선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여부 검토시엔 해당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현황, 영유아수, 수급률(수요대비 시설 정원수), 접근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 중 수급률이 100%미만이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서울시 평균(22.1%)이하인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는 시가 적극 설치를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 기존 건물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지난 해 108개소 확충에 이어 올해도 최소한 100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17일(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올 한해 약 6천명의 영·유아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2014년까지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2개소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많은 비용과 부지확보 어려움이 있는 신축을 대체할 비용절감 모델, 민관상생 모델, 지역균형 모델 등 서울시만의 독특한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따라서 개발한 비용절감모델을 통해 올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무상보육 시대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2013.02.1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구성 운영 그동안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계속 미 이주하는 세대에 대한 법원 집행관의 강제퇴거 조치는 적법한 절차이나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정비 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을 떠나서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의체」를 통하여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합의에 의한 이주를 유도함으로써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및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조건부 인가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명도소송 진행 중인 25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이주 및

철거 현황”을 매주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봉천 12-1 구역, 신길 11 구역 등 9개 구역이 강제철거 없이 이주 완료 되었으며, 현재 성동구 금호 20구역 등 16개 구역에 대하여 매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하여 도정법상 동절기(12월~2월) 철거 제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혹한기에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경우 주거권을 넘어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지난해 12월~올해 2월말까지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를 사전 예방하고,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3.02.20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 설명서 따라서 쉽게 참여 하세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매뉴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활용설명서」발간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업매뉴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활용설명서」를 발간했다.

‘서울에서 함께 마을하기’라는 부제를 단 「마을공동체 사업 설명서」는 서울에서 함께 마을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는 길잡이 책으로, 마을의 개념부터 유형별 형성과정, 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 양식 등을 쉬운 말로 담고 있다.

특히 서울 마을공동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공동체 형성과정을 유형화해 담아, 기존의 도농복합도시에서 펼쳐진 마을 사업과 달리 대도시 서울에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던 시민들의 막연한 낯설음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02.26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인발연, 인천시 특별건축구역제도 연구결과 발표

건축법에 새로 도입된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적용기준과 적용대상, 특례사항을 검토해 건축의 디자인 수준 향상

인천발전연구원은 2012년 하반기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건축법에 새로 도입된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적용기준과 적용대상, 적용에 따른 특례사항을 검토해 인천광역시 건축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는 데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 연구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적용대상으로 ①경제자유구역 및 공공건축물 등 공공사업 영역, ②도시개발사업 등 민간사업 영역, ③원도심 노후지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적으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 확대에 대비한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의 지정, 가이드라인 작성, 교육 및 홍보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2013.02.13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대구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

최근 도심의 인구 유출 및 슬럼화 등으로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생이 도시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정비사업 방식은 수익성 위주였다.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개발이라는 물리적 정비 방식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 공동체 붕괴, 도시경관 획일화, 원주민 재정착 및 서민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경기 침체기에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돼 도심 낙후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획일적인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사업으로는 기존 주택지를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달성토성 주변을 정비하는 ‘행복한 날피골 만들기 사업’,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해피타운 프로젝트’ 등이 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구 내당2·3동 일원(무침회 거리 주변)에는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에서 탈피해 마을의 역사가 보존돼 있는 노후 단독주택지를 보존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폐·공가를 주차장, 텃밭 등 생활기반시설로 정비하는 한편 벽화거리 조성을 통해 마을미관을 개선하고, 사회취약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운영 및 주민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201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선정돼 공동작업장과 주민 커뮤니티센터도 신축할 계획으로 올해 1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구시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과학벨트 시행계획 수립...교과부 제출

회덕IC 신설, 충청권 철도망 구축사업 등
신규 사업 포함 총 11개 사업

대전시는 올해 신동·둔곡지구에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본격 추진에 대비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이는 과학벨트 기본계획(2012~2017)에 따라 시에서 추진할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계획은 시 주관 과제 2개, 타부처 협조사업 7개, 회덕나들목(IC)신설 등 2개의 신규 사업 등 총 11개 사업내용으로 수립됐다.

우선 시 주관 과제 중 '거점지구 인근 외국인학교 설립'은 지난해 지정돼 지난해 8월 완공·개교해 국제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했다. 또 하나는 '거점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오는 6월로 계획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히 승인할 방침이다.

부 문	과 제 명 (사업명)	추진상황	대전시 역할
계	11개 사업		
거점지구 조성	거점지구 인근 외국인학교 설립	완 료	주 관
	특구개발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고시	추진중	"
	외국인 One-stop 지원서비스 제공	"	협 조
	거점-기능지구간 교통체계 구축		"
	〈행복청〉 세종시~대전시 BRT 14.1km	추진중	"
	회덕IC 설치 L=860m,	신규건의	"
	해외 접근성 강화		"
	천공항간 KTX 연결선(2.2km) 신설	추진중	"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구축	청권철도망 구축 / L=106.9km	신규건의	"
	산업시설용지 조성 및 전략적 기업 유치	추진예정	"
	성과확산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	"
	거점지구에 필요한 장비개발·인력지원	"	"

이와 함께 거점-기능지구(청원군·천안시·세종시)간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전역~와동IC BRT(간선급행버스체계)구간 중 농수산오거리~와동IC 구간을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체 발굴한 회덕IC 신설과 충청권 철도망 구축사업 등의 과제를 과학벨트와 연계·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정부의 과학벨트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교과부에 요청했다. 회덕IC 설치사업은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영·호남권(경부고속도로)과의 최단거리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신규로 건의됐다. 또 충청권 철도망 구축 사업은 과학벨트조성 사업이 오는 2017년도 완료될 시점에 맞춰 논산~대전~조치원~청주 공항을 연결하는 철도의 조기완공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 시에서 건의한 시행계획은 이달 말 교과부에서 과학벨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3.02.04
대전광역시 과학문화산업본부 과학특구과

대전시, 도시환경색채 특성화사업 첫 결실

한밭도서관 주변 방음벽 색채디자인 완료...내년까지 시설물 5곳
사업 추진

대전시가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 공간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환경색채 특성화사업'의 첫 결실을 맺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한 한밭도서관 주변 방음벽 및 옹벽 색채 환경사업을 완료했다.

대전시 한밭도서관 주변 방음벽 및 옹벽은 색상과 패턴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탈색이 심해 도시 미관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번 색채특성화사업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색채로 새 옷을 입어 한밭도서관 및 주변 녹지공간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됐다. 시는 올해 오정지하차도와 내동보도육교에 디자인

패턴 적용 및 도색작업을 시행하는 등 내년까지 5개 시설물에 대해 추가로 색채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도심 속의 낙후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색채환경개선 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13.02.04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울산산학융합지구 지정, 울산형 실리콘 밸리 조성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단 내 멀티캠퍼스 구축(11만 8800천㎡, 1,014억 원)

울산대학교가 주관하고 UN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울산시가 참여한 ‘울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울산산학융합지구로 공식 지정되어, 금년 2월 중 창립총회, 이사회 개최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본 사업은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단 내에 11만 8800㎡ 규모로 2016년까지 5년 간 국비 230억원, 대학·연구소·울산시 컨소시엄 784억원 등 총 10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학생 1000명과 교수 100여 명 등을 수용하는 산학일체형 현장 중심 캠퍼스로 설립된다.

특히, 울산산학융합지구는 참여기업 및 학생 수, 사업규모 및 예상성과 등 측면에서 지난해 선정된 경기 반월·시화, 경북 구미, 전북 군산과 올해 선정된 충북 오송, 전남 목포 등 6개 사업 중 최대 규모의 산학융합지구이다.

울산산학융합지구에는 R&D연계 현장맞춤형 전문교육, 선취업 후 진학 근로자 평생학습 교육, 기술사관 교육 등을 전담할 멀티캠퍼스와 프로젝트 랩(Lab), 비즈니스 랩(Lab), 기업연구관 등 다양한 산학 융합형 기업지원 인프라가 조성될 계획이며, 울산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을 지원하게 될 기업연구관에는 80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하여 혁신기술과 제품개발의 산실 역할을 하게 된다.

울산시는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하게 되는 테크노산단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산업단지 등의 3000여 개 기업들과 지역 대학, 국책연구소, 테크노파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자동차, 조선, 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바이오, 나노, 에너지, 첨단소재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3.02.04
울산광역시 산업진흥과

울산시, 공동주택 외벽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100세대 이하 중소형 아파트 대상 5개 단지 대상

울산시는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체 브랜드가 취약하고 건물 특성 및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은 단순 도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전문디자인 인력을 활용하여 울산 경관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외벽 색채,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을 5개 단지(구군별 1개 단지)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울산지역에서 준공 후 5년 이상(2007. 12. 31 이전 준공)경과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해당 단지는 2월 15일까지 구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추진 일정은 2월까지 해당 아파트에 안내문 발송 및 지원 희망 아파트 수요조사를 비롯해서 지원 단지 선정 및 선정 아파트 입주민 간담회 등이 실시되고 3월부터 11월까지의 공동주택 외벽 색채 디자인 도안이 배부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 사업은 300세대에서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는 울산시가 지난 7년간 디자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 온 결과, 울산 시민들의 디자인 수준이 높아져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에서도 단순 도색이 아닌 디자인 제안 등 아파트 도장 업체와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도색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유지관리비가 적은 100세대 이하의 공

동주택 단지의 경우는 도색 비용이 적어 업체가 디자인(안)제안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울산시가 중점 지원한다.

2013.02.04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부산시, 2013년 서민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폐·공가 없는 쾌적한 정주(定住)환경 마련을 위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여 서민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폐·공가 없는 쾌적한 정주(定住)환경 마련을 위해 부산시는 공가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서민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민주거환경 정비사업에는 서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비 70억 원, '폐가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폐가철거 사업비 16억 원,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반값에 임대하는 햇살동지 사업비 20억 원 등 총 1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노후하고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 재개발 또는 뉴타운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마을회관(공동작업장)등의 공동이용시설, 마을 안길·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폐가철거, 노후주택정비 등 사업 구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합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폐가 철거에 대한 한계극복 및 도시미관, 안전 등을 위해 '폐가없는 마을 만들기 3개년 사업'도 강력히 추진된다. 부산시는 올해를 '폐가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원년'으로 정하고 폐가철거사업이 범시민적인 관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철거 능력이 없거나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활용을 동의할 경우에는 동당 최대 8백만 원

의 예산을 지원하여 철거하는 방법(자진철거+예산지원철거)도 병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심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 반값으로 임대하는 햇살동지 사업이 작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는 대상과 지원기준 등을 현실성있게 개선하여 확대 추진한다.

부산시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중에서도 폐가의 자진철거나 공가 리모델링 등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비롯되며, 2013년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서민주거환경정비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3.02.13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

광주시, 도시재생형 공폐가 정비사업 추진

공폐가 매입 후 도시재생형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광주지역 도심 내 공가(폐가)는 지난해 3월 조사 결과 동구 385동, 서구 361동, 남구 559동, 북구 363동, 광산구 278동 등 총 1,946동으로 집계됐다.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공가(폐가)에 대해 도시 재생형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소유자 동의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추진하면서, 도시재생 효과가 기대되는 공폐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매입한 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심재생효과가 기대되는 공가(폐가)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매입 후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 후 주변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량가옥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 철거 후 쉼터,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 공공시설 조성을 유도하며, 방치가옥은 출입문 폐쇄 등 방범·보안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와 방역 실시 등 환경정비를 시행하도록 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공폐가 총 250동을 정비

해 텃밭 93곳, 주차장 29곳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60여동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재생효과가 기대되는 3곳을 매입해 도시 재생형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구 도심지역 내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자치구별 환경관리 등이 포함된 공가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를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공폐가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로 시비 10억과 구비 1억7,000만원을 포함해 11억7,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러한 공가 부지를 텃밭,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가 소유주들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3.02.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3단계 국고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도시 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중심 지원

2단계에서 8개시 15개 지구에 국도비 등 총 1,558억원 지원, 도로개설,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경로당 등 확충 등 경기도가 도시 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1989-2002년)’에 따라 도시 내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정비·개량하고 개인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 또는 수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3단계 사업을 추진기로 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3단계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3단계 사업에 10개 내외의 신규 사업을 ‘현지

개량 방식’ 위주로 신청할 예정이다. 현지 개량 방식은 주택은 존치한 채 도로, 주차장, 경로당,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한편, 경기도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 8개 시 15개 지구에 대하여 국·도비 등 총 1,558억 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왔다.

2013.02.07
경기도청 용북합정정책과 맞춤형정비팀

경북도, 동해안 해양관광 개발 박차

바다와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국민휴양지

경상북도는 올해 국·도비 등 88억원을 투자, 해양레포츠, 해양휴양 시설 등을 개발해 동해안을 바다와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국민휴양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진군 스킨스쿠버 리조트, 영덕군 오션월드 조성, 울릉군 천부리 수중전망대 등 5개 사업을 올해 안으로 완공해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전천후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울진군 원남면 오산항 인근의 스킨스쿠버리조트 조성사업(2008~2013, 250억원)은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2011년 개관)진립에 이어 올해 레저선박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수중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해양레포츠의 중심지로 개발한다. 영덕군 창포리에 전국최대 풍력단지과 산림문화공원과 바다를 연계하는 오션월드 조성사업(2009~2013년, 60억)은 사계절 체험·체류형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안산책로, 조형물 등을 설치, 주변관광지와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한다. 또 울릉군 천부리의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2008~2015년, 200억)은 국내 최초의 수중전망대(2013년 2월 개관), 인공해수풀장, 친수공간조성 등으로 체험형 관광의 수요 증가를 충족하는 국제적인 관광섬 개발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포항 구항지구의 연안유류지 개발사업(2012~2016년, 100억)은 수변광장, 해양공원 등 해양생태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상주시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낙단보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상주 낙단보 수상레저센터(2013~2015년, 46억원)를 조성하고, 포항시 북부 해수욕장에 여름철 성수기를 전후한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개소를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단체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이밖에도 역사문화, 명품녹색 섬 조성을 위해 경주시 양남면 주상절리를 역사문화와 어우러진 해양경관 조망공원 등 주상절리 해양공원으로(62억원)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릉도·독도 녹색섬 개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상주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개발계획도

경상북도는 동해안을 아름답고 특색 있는 체험·휴양형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울진의 해양과학교육관 건립과 더불어 마리나 항만개발, 연안 및 국제크루즈 등 중장기 해양관광 활성화 과제도 국가정책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3.02.04
경북도청 환경해양삼림국

KT&G 춘천 상상마당 조성 본격 추진

예술적 상상을 키우고 세상과 만나고 함께 나누며 행복해지는 곳 강원도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KT&G 춘천 상상마당」이 마침내 체육회관 및 어린이회관의 매매계약을 2월 13일 체결함에 따라 본격 추진된다. KT&G는 3월부터 9월까지 설계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10월 개관할 계획이다.

「KT&G 춘천 상상마당」 조성사업은 지원, 소비, 소통의 선순환 구조로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 한다는 개발 컨셉과, 대중지향, 어린이특화, 역사적 가치보존 및 문화·관광과의 연계를 운영방향으로 하여 문화예술과 관광 레저가 공존하는 신개념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KT&G가 춘천시 삼천동 223-2번지 일원의 어린이회관과 도 체육회관 2만여㎡의 부지에 5년간 사업비 33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건축물 리모델링 및 공간조성비로 8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프로그램 운영비로 220억원, 기타 페스티벌 등의 운영에 30억원을 5년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하여 춘천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을 완성할 계획이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상상마당 춘천 밴드메이킹, 수요일 호수피아노, 1박2일 춘천 음악여행, 유소년 예술교육, 청소년 문화체험여행, 일반인을 위한 문화체험 숙박 프로그램 등 10여개의 '상시 운영 프로그램' 과 춘천 뮤직 페스티벌, 강원학생 동아리 한마당, 주니어 상상페스타, 영화제 등 6개의 '특별 프로그램' 을 운영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조성되어 운영될 경우 강원지역에 미칠 기대효과는 '상상마당' 의 연간 관광객 50만명의 유입과 외부 유입 관광객으로 인한 연간 150억원 이상의 소득창출 및 '상상마당' 의 각종 미디어 노출을 통한 직·간접적 지역 홍보효과로 연 21억원 이상의 홍보효과 발생이 기대되는 등 강원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3.02.13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경남도, 하동항 신규건설, 조선·해양플랜트 거점항만으로 육성

2020년까지 국비 1444억 원 투입 및 2030년까지 추가 국비 354억 원 투입 계획

경남도는 국토해양부, 하동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하동항 개발 방안을 수차례 협의하여 하동항의 신규 항만시설로 우선 2020년까지 국비 총 1444억 원을 투입하여 잡화부두 3선석, 예인선 등 항만역무 제공을 위한 관리부두 1선석, 각종 화물선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 준설, 갯벌 탐방로 등 친수시설을 개발한다. 추가로 2030년까지 잡화부두 1선석 개발을 위해 35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1798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및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에 국토해양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고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4~5월경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고 2014년에 하동항 개발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영향조사 등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항만개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갈사만조선사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등의 분양 활성화 및 향후 입주 기업의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항만하역업, 기항선박에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 예·도선업 등 항만관련산업이 유치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하동항이 조선·해양플랜트 거점항만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하동군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2013.02.13
경남도청 해양수산국 항만물류과

인천시,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시행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전산화 하고 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

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전산화하고 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건축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건축 심의도서를 책자형태로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개별 포장한 후 배부하던 것을 민원인의 방문없이 E-mail(PDF)로 접수하여 심의위원에게 배부함으로써 도서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을 연간 1억 5천여만원 절감하며, 전자발송에 따른 심의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의결과를 즉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재심을 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 시행하여 원도심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및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3월 심의시부터 절차 간소화를 시행하고, 이를 군·구에 전파하여 년 간 450여건에 달하는 기존의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2013.02.21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대전시, 둘레산길 일제 정비...명소화 추진

대전둘레산길 연결지선 체계적 정비...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네트워크 조성

대전시는 올해 21억 원을 투입해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둘레산길 12구간(133km) 중 67km를 정비한다. 우선 시는 대전둘레산길 진입로인 지선을 중심으로 방향표지판, 해설판, 목계단, 화장실 등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또 호

우 등으로 인해 훼손돼 통행에 불편을 줬던 등산로는 관리인을 집중 배치하고, 동일 노선 이용이 빈번해 훼손이 심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시 등산관련 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장 노선이 긴 둘레산길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기업 참여와 함께 자율관리제를 연중 운영하며, 생활권 등산로인 사이언스길, 대청호반길 등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충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근 웰빙 문화 등의 확산과 함께 등산, 트레킹이 가장 대중적인 산림휴양활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앞으로 둘레산길이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비·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3.02.20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울주군 삼남면 가천 일원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울산시 '삼남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착수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51-90번지 가천저수지 서편 기존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을 울주군이 요청함에 따라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 구역은 부지 19만 4140㎡ 규모로 '복합형(주거형+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토지 이용은 주거용지(단독 122세대), 관광휴양용지(수목원, 민속촌,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울산시는 금주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대한 주민공람 후 관련기관(부서 등)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특화된

공간의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역은 지난 2010년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집단으로 건축허가가 접수됐으나 울주군은 기반 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건축 불허 처분했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기각), 행정소송(1, 2심 울주군 승소)등이 제기되는 등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 왔다.

2013.02.18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확산보급

올해로 5회째, '13년 유니버설디자인 등 3개 분야 추진

충청남도의 '2013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분야, 시골마을 풍경스케치분야 등 3개 분야를 추진한다. 특히 시골마을 풍경스케치사업은 충남도 역점정책인 '3농혁신사업' 중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융·복합 연계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지역의 공원, 공중화장실, 주민자치센터, 사인물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마을주민과 관이 공동주체가 되어 지역을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꾸미어 마을의 문화 및 정체성을 살려 삶의 질을 높이는 충청남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2009년에 전국 처음으로 시작해 올해로 5회째 접어든다. 작년에 시작한 '논산 양지뜸 도자기 굽는 마을풍경 스케치사업'은 올해도 1월 계획심의를 득하고, 3월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7월경 완료하여 선보일 예정으로 도 및 논산시는 그동안 인구 밀집 도심지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소외되거나 변질되어가는 농어촌의 경관과 정체성을 보존·발전시켜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어 농어민은 물론 도시민의 안식처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월 중순까지 사업대상을 공모한 결과 6개 사업 대상에

13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특히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사업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등 7개 시군이 사업 신청으로 2.3대1의 경쟁률을 보여 시골마을 주민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준 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했다.

충청남도는 공모사업신청 총 13건을 대상으로 1, 2차 심사과정을 거쳐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3개소,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분야 1개소, 시골마을풍경스케치 분야 3건을 선정하게 된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시군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질적으로도 좋은 공공디자인이 제안되고 있어 사업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2013.02.21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2013.02.27

전북도청 건설교통국 토지주택과

전라북도 도시경관 확 바뀐다

‘13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2개(15억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1개(1.5억원), 기 추진 경관디자인 사업 7개(327억원)

전북도는 금년부터 품격있는 경관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자체 경관디자인 시범사업과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인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도자체 시범사업은 금년부터 2개년에 걸쳐 15억원을 투입 가로환경조성,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는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인 완주고산 신타리지 고산만들기사업(설계비 1.5억원)이 선정되어 고산지역의 역사문화를 이용한 저점형 경관디자인 마스터 플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사업, 국토해양부의 국토환경디자인사업 등 중앙부처의 경관디자인 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장기적으로는 ‘14년부터 ‘20년까지 105억 원을 투입, 14개소의 경관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3년 3월호 (통권2호)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일 : 2013.05.31

발행인 : 제해성

ISSN : 2288-274X

편 집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담당자) 031-478-9845, kslee@auri.re.kr (이경신)

